탄 원 서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등 사건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귀중
사건번호 사건번호: _____ (제출 전 조회)
피고인 윤석열
탄원인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의 확인은 어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전제 아래,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도 오직 구체적인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별검사팀은 2023년 채 해병 순직사건의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부당한 지시가 전달되어 수사 내용 변경과 사건 이첩 보류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별도 사건과는 재판의 대상과 법률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재판의 결론이나 보도 내용을 곧바로 이 사건의 유무죄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시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느 직위의 공무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강한 질책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직권남용 또는 기타 범죄의 고의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재판부께서는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결재되는 과정,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는 절차, 사안의 관할과 지휘 권한, 통화·문자·회의 자료의 시간순서를 차분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의 기억에만 의존한 설명보다 당시 작성된 문서와 일관되게 보존된 객관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 지휘체계에서의 보고나 업무 조정이 허용되는 범위와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시의 경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및 고의가 직접 또는 충분한 정황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은 모든 수사 과정의 논란에 대한 일괄적인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용된 개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입니다. 수사결과 수정 요구, 기록 회수, 브리핑 취소, 이첩 지연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누가 결정권을 행사했는지와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지시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채 해병의 순직 진실을 밝히는 일과 특정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일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의 아픔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장이라 하여 충분한 반박의 기회 없이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재판부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시·관여 정도와 법적 권한의 범위를 신중하게 구분하고 합당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모든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함께 실현되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귀중